

내 아이만 챙기기에 혼잡...배려가 필요해

교통사고 줄입시다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중> 스쿨존 불법 주정차

30분간 교문앞 차량 85대 북적
횡단보도 위에 버젓이 주차
통행 막고 자칫 대형사고 초래
단속 강화에도 이기적 운전
부모들 성숙한 운전 습관을

고1·중2·초3~4학년이 추가로 등교수업을 시작한 3일 오전 8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운전초등학교 주변 왕복 4차로 중 2차로는 주·정차된 학부모들 차량으로 가득찼다.

교문 앞에 버젓이 차를 세운 학부모들은 비상등을 켜놓고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아이들을 내려 보내다 줬다. 이렇게 되면 주차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더라도 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정차한 뒤 인근 문구점으로 뛰어가 준비물을 구입해 전해주는가 하면, 아예 횡단보도에 차를 세워 자녀 또래 친구들이 건너는 것을 방해하는 학부모들도 눈에 띄었다.

고작 30분 동안 85대 차량이 '스쿨존'에 주·정차를 하며 자녀들을 실어날랐다. 이 일대는 시속 30km 이상 속도를 내면 안 되고 주·정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스쿨존이지만 무색할 정도였다. '자기 자식 건널 때는 안되고 남의 자식은 상관없다'는 식의 학부모들의 행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학부모들 차량이 줄지 늘어지면서 다른 차량들의 흐름을 막는 일도 빈번했다. 이렇다보니 학교 교통 안전 요원 역할을 맡은 공공근로자들이 학부모들을 대신, 차량 문을 열고 학생들 하차를 돕는 모습도 포착됐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운전초교 앞 도로가 불법주정차된 학부모들 차량으로 가득차 있다.

내 불법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됐지만 여전히 경고등이 켜진 '스쿨존'이 적지 않다.

특히 민식이법 등 아동안전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불법 행위는 관대한 학부모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달 8일 광주시 광산구 점단초교 앞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도 사고지점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시야가 제한적인 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줄어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53

만3775건(2017년) ▲58만1408건(2018년) ▲63만6498건(2019년)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소상공인 등을 배려하기 위해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면서 '스쿨존'도 포함시키는 잇박자 행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11만5833건 중 전체 76%(8821건)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10시간) 사이에 발생했다는 게 도로교통공단 분석이다.

정오~오후 2시(1만6588건)에 발생한 사고도 1만6588건(14.3%)에 달했다. 이런데도,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주·정차 단속이 유예되다보니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도 별다른 조

치가 없는 것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사고가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다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교통안전요원을 배치, 아예 학교 정문 일대 주·정차를 막고 있다.

김양식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 본부장은 "광주지역에서는 스쿨존 등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간임에도 버젓이 그것도 아주 태연스럽게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주정차는 불법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인을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해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 등 관할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법정에 선 소년범의 '얇은 슬라이퍼'

재판장 "소년원 나올 땐 운동화 착용 생각해보시죠" 제안

소년원측 "도주 우려 때문에..."
인권 배려한 교정정책 아쉬움

"소년원에서 나오셨죠? 밖에 나올 때 슬라이퍼를 신고하라는 것, 생각해 보시죠."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의 눈이 법정에 들어서는 10대 피고인 A(16)군의 발에 멈춰섰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군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낚은 '삼선' 슬라이퍼를 신고 나왔다.

A군은 지난 2018년 11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A군에게 "그 슬라이퍼, (소년원에서) 지급받은 거죠? 그것 밖에 없나요?"라고 묻은 뒤 동행한 소년원 관계자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A군에게 지급하는 운동화가 있을텐데 슬라이퍼를 신고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취지였다.

방청석에 앉았던 소년원측 관계자

는 "운동화를 지급하지만 도주 우려 때문에 운동화 때 빼고 슬라이퍼(실내용화)를 착용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년법에 이같은 규정은 없다.

A군 같은 소년범의 경우 법이 정한 죄값을 치르면서도 지급받은 운동화 착용마저 교정기관 편의대로 제한받는다는 얘기가.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르고 소년원에 오게 된 청소년들이지만 인격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재판장도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소년원 밖으로 외출할 경우 운동화 착용 등을) 생각해보시죠"라고 제안했다.

법정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요즘 10대들은 3분 거리 집 앞 편의점에 갈 때도 거울을 본다"며 "그들의 감수성을 배려한 섬세한 교정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재판장은 A군을 견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학법인 이사장 고발

광주교육청, 검찰에

광주교육청은 3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모 사학법인 A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사학법인에 대한 법인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A 이사장이 2016년 8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423건 1500여만원을 부당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

A 이사장은 법인 소재지가 아닌 서울 등지에서 편의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마트, 호텔, 병원, 렌터카 이

용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심지어 간대과 공휴일에도 법인 카드를 다수 사용했다.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에 대해 법인 회계담당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았으며 사용 목적과 사용 대상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 업무경비로만 기재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4년여 동안 법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업하던 여수 선적, 멸종위기 브라이드 고래 사체 발견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 고래가 제주근해에서 조업중인 여수선적에 발견됐다.

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 선적 A호(69t·승선원 7명)는 전날 제주근해에서 조업 중에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 고래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A호는 여수 근동항에서 출항해 제주도 동방 약 80km에서 조업 중 바다위에 떠있는 고래의 사체를 발견해 여수시 봉산항까지 끌고 왔다.

길이 8m, 둘레 4.6m인 이 고래는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사진감별 결과, 보호어종인 브라이드 고래로 확인됐다.

브라이드 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유통과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해경은 작살 등 고의 포획 흔적이 없다는 점 등으로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인계했다.

여수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일 쓰레기매립장에 묻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새봉 도로 개설 원점서 검토될 듯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부 유권해석

광주시 "지침 오면 따르겠다"

한새봉 도로 개설 논란 (광주일보 5월 12일 7면) 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

임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도로 개설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는 환경부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측은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북부순환도로(1구간)는 환경영향평가법(32조

2항)에 따라 5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지 않아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광주시는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한새봉을 우회하는 순환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고 철회하고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기로 번복한 광주시를 비판해왔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는 한새봉 관통 도로를 북부순환도로 전체 구간

중 일몰제 적용을 앞둔 1공구 3.22km 구간에 속한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내달 1일 자인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서둘러 추진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유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측은 "만약 재협의해야 한다는 회신이 오면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